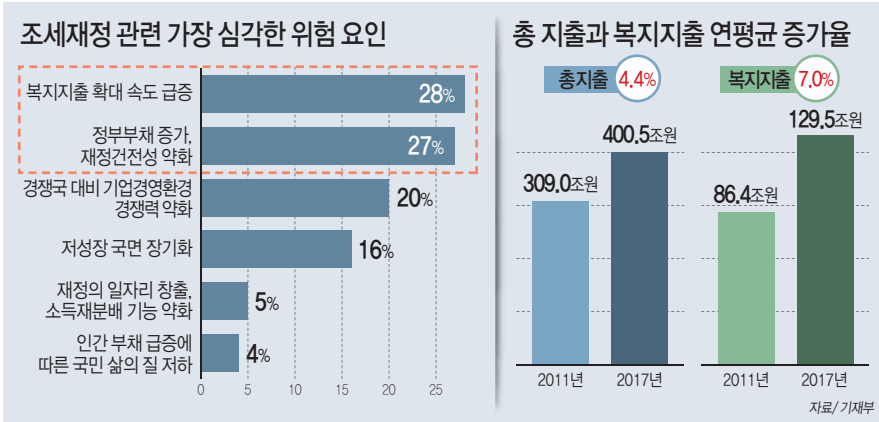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조세재정 위험요소

"복지지출" 28% "정부부채" 27% "기업환경악화" 20%

한경련 57명 설문조사
"면세자 비중 줄여야"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5명이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과 이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분야에서 경제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년~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재정개혁의 목표로 과세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밖에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세목 항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기준 미국아 32.5%, 일본 15.4%, 호주 16.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씨를 만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 닷새 만인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은 영장 청구가 결정된 뒤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 '영장심사 불출석' 구속여부는 내일 새벽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늦어도 오는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시기부터 이 회사를 차명 소유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이 차지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07쪽에 이르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하고 방대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을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지난 달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댓글 폐지, 포털에 과징금 부과" vs "과잉규제 보단 AI로 팩트 체크"

'가짜뉴스' 국회 토론회

포털·SNS 사업자 의무·책임 법제화
민주주의 주요가치 훼손 '딜레마' 직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며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은 용인할 수 없고, 법과 제도·정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유통 창구로 쓰이는 댓글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포털이나 SNS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며 "포털과 SNS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조만간 가짜뉴스 유포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조치를 의무화 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분기별로 가짜뉴스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사업자들은 가짜뉴스 관련 규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댓글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달 말 '댓글정책이용자패널' 구성을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포털은 모든 뉴스가 제휴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통은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고 인터넷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합의 과정을 이뤄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가짜뉴스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정상적 여론을 변질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가 훼손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로 인한 문제가 더욱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국가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혁신 지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오픈소스 공개 등으로 가짜뉴스를 체크하는 기술 지원에 나서거나 이와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AI 알고리즘 이용해 AI R&D 챌린지 통해 지원했고, 올해도 이를 통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포털 등도 자체적인 운영 정책 등이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사업자와 가짜뉴스 방지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나인 기자 silkni@